

##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방안

박복순 연구위원  
(02-3156-7129, pbs0113@kwidimail.re.kr)

### 요약

-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빠른 발전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하고 있음(「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2018년 9월 14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정책담당자가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피해자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가해자가 한 명일 때보다 각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는 만큼, 차후 국가의 삭제지원 서비스에 대한 삭제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할 때 삭제지원 건 당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포된 영상물과 유포 행위자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자료로 삭제지원 비용 표준(안)을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

- ▶ 우리나라의 높은 스마트폰의 보급률과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빠른 발전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 수립과 후속조치

- ▶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8. 3. 13. 공포되어 2018. 9. 14. 시행됨.
- ▶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어 피해를 입은 디지털 성폭력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국가가 해당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하도록 함(「성폭력방지법」제7조의3).

이에 따라 촬영물 삭제를 위한 지원의 내용과 방법, 구상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하위 법령을 구체화하고,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 디지털 성범죄 현황

-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범죄 중 3.9%였으나 2012년 이후 증가폭이 커져 2015년에는 24.9%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6년에는 17.9%로 나타나서 성폭력범죄 중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대검찰청, 2017:14-15).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인성행위정보 심의건수는 2012년 1,130건에서 2016년 7,356건, 시정요구는 2012년 1,044건에서 2016년 7,325건으로 증가하며, 개인성행위정보 심의건수 기준 2012년 대비 2016년에 6배 이상 증가(신경민 의원실(2017), 서승희, 2017:62 재인용)한 것으로 나타남.
- ▶ 최근에는 애인과의 성행위 영상을 몰래 촬영한다든지, 혹은 동의하에 촬영하였지만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하는 비동의 영상유포 성적 촬영물의 피해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지인능욕'이라는 여성지인의 셀카를 성적인 모욕과 함께 합성하여 게시하는 행위 등 디지털 촬영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임(서승희, 2017:63).

##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및 대응상의 문제점

- ▶ 디지털 성범죄 행위는 비록 물리적인 접촉은 없지만 현실공간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자아'에 심각한 충격을 가하는 폭력행위이며, 피해 결과 우울증, 분노, 보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실제 성폭력을 당하는 듯 한 모욕감 등에 시달리는 특성을 지님(김은경, 2001:72).
- ▶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며, 디지털 성범죄가 통신 공간에서 발생할 때 여성의 심리적 위축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참여와 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존재함(김은경, 2001:73).
- ▶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촬영물을 통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권력 행사, 남성 집단의 놀이 등으로 인식되며, 영상물이 한번 유포되면 인터넷과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함.
- ▶ 또한 불법 촬영물의 유포 댓가나 합성 대가에 대한 상품권 거래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돈이 거래되는 상품이 되고 거대한 디지털 포르노 시장을 형성하는 악순환을 낳기도 함(김은실, 2018:54).
- ▶ 이러한 특성을 지닌 디지털 성범죄는 위장 카메라 등의 판매 및 촬영, 유포 및 신고, 단속 및 수사,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음.

< 표1 > 디지털 성범죄의 단계별 문제점

단계	문 제 점	단계	문 제 점
판매 · 촬영	소형 · 변형카메라 수입 · 판매 관련 무규제 → 이력관리 불가능	가해자 처벌	몰카 촬영자 및 불법영상물 유포자 실질적인 처벌 수준 경미(벌금형 등)
	몰카 촬영사실 인지 및 적발 · 단속의 어려움		보복성 영상물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요건 미비
유포 · 신고	불법영상물 신속한 검출 · 차단 위한 기술적 · 제도적 방안 부재	피해자 지원	피해사실 신고-상담-사후관리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체계적 지원 부재
	영리목적 유포자(웹하드 업체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미흡		피해자가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이중고
단속 · 수사	디지털 성범죄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수사기법 · 대응력 부족	예방 · 교육	몰카 영상물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피해방지를 위한 홍보 · 교육 미흡
	공중화장실 등 몰카 단속 위한 탐지기 등 인프라 미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7),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피해 방지 종합대책 요약」 p.1에서 재인용함.



## 디지털 성범죄 지원 방법 및 내용

###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함(관계부처합동, 2017:1). 종합대책은 ‘디지털 성범죄 Zero, 국민 안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전 과정에 걸쳐 총 22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추진 중임(관계부처합동, 2017:2).
- ▶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피해신고센터 운영 및 원스톱 종합서비스 시행,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기록물 삭제비용 가해자 부과계획을 밝힌 바 있음.
- ▶ 이에 따라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gateway)로 운영하고, 신고 즉시 경찰 신고에 필요한 채증 및 긴급 삭제 지원,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보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의 피해자 종합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고(관계부처합동, 2017:9),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8.4.30.~현재)를 운영하고 있음(여성가족부, 2018b:38). 또한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에 수반될 불법촬영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을 현재 입원기간 1주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긴급구조금 지급 상한을 긴급구조금 지급 결정 시 예상되는 구조금액의 1/3에서 1/2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령 개정, ‘17.12.19.)함. 그리고「성폭력방지법」일부 개정(‘18.3.13.공포, ’18.9.14.시행)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및 구상권 행사 근거를 마련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현황

- ▶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종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해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소송 지원, 사후 모니터링(점검)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함. 동 지원센터는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 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http://www.women1366.kr/stopds))을 통해 상담 접수하면 피해 양상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여성가족부, 2018c:7).



## 피해자 지원체계 운영상의 시사점

- ▶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는 현실 생활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불법 촬영물 유포 피해와 관련된 삭제 지원이나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 등의 지원은 미흡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새로운 도약단계를 맞이함.
- ▶ 2017.10.25.~12.31.까지 서울시예산사업으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어 소개함(최자은, 2018:57-69). 시범사업을 통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한계로는, 현재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사이버성폭력 상담의 경우 실제 본인의 영상 확인 및 이를 통한 상담가와의 면대면 상황을 피하거나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문제가 있어 상담가의 신뢰성 확보 및 이를 통한 상담환경 마련이 필요함(최자은, 2018:64). 법률 지원과 관련하여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구조사업에 의한 변호사 선임제도는 유포 피해 중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최자은, 2018:65). 수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물을 증거로 제출하고 재생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성기 등 ‘음란한’신체가 드러나는지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수사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수사관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피해를 경미하게 판단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음. 트라우마 치유 심리상담 연계와 관련해서는 트라우마 심리상담은 심리치료, 법률 지원, 삭제 지원이 동시에 진행되는 점에서 기존의 트라우마 치료와 차별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리상담 연계가 필요함(최자은, 2018:66).

## 3

###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필요성

피해자 개인이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먼저 주체가 되어 삭제 지원을 한 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에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에 의미가 있음.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구상권의 행사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책임 외에,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게 됨. 또한 이는 범죄유발요인이 되는 충동적 욕구를 차단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범죄를 억제하는 외부적 요소로서 기능하게 될 것임(원혜욱 외, 2014:17).

더불어,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후 국가가 불법행위를 행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비용을 회수한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소요된 삭제지원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존재함.

## 구상권 행사의 요건

디지털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음.

- ▶ 우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어야 하며, 그 촬영물이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야 함.
- ▶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촬영물 삭제지원을 받아야 하며,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금액의 산출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문제됨.
- ▶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함. 먼저 피해자가 자신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 신고하거나 경찰의 수사를 통해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성폭력행위자에 해당하며, 국가는 이 특정된 성폭력행위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원칙적으로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나, 기소유예 등으로 검찰에서 종결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함.
- ▶ 또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등의 이유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하지 않고 촬영물만 삭제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와 관련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성폭력행위자성을 판단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청됨.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정한 구상권을 국가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본다면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는 5년을 적용받게 됨. 그런데 끊임없는 재유포와 삭제가 반복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삭제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법촬영물 삭제에 따른 비용 구상을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민법」은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규정하고 있음(「민법」 제166조제1항).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으로 인한 구상권의 경우는 삭제지원이 진행된 후에 성폭력행위자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음.
- ▶ 「따라서 성폭력행위자의 특징은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서 정한 구상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국가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하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행위자가 특정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함에 법률상의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시효가 기산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 구상권 행사 절차

삭제 비용 구상 절차는 일반적으로 구상권 행사 결정과 함께 채권보전을 위한 처분, 임의변제 통보에 따른 변제 시 회수절차 종료, 불응 시 소제기 결정에 따른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순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음.



###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비용 구상을 위한 절차 도식

출처 : 원혜옥 외(2014), 구상권 행사 활성화 방안 연구, 법무부, p.27 재구성



## 구상비용 산정의 필요성

「가정폭력방지법」의 ‘치료보호비’와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구조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에 대한 구상 시에는 ‘치료보호비’와 ‘범죄피해구조금’,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이라는 국가가 사전에 지급한 금액이 정해져 있어 구상 비용 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됨.

그러나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삭제지원을 한 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하면서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법 개정 이후 재정부담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전에 점검되지 않음.

비록 입법 당시에 삭제 비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구상권 규정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영상물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절한 산정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상비용 산정 방안

### [1안]

- ▶ ‘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8.6.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서비스’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삭제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를 계산하고, 피해자 1인당 소요된 시간을 산출하여 삭제에 소요된 비용 산정

#### 식1

삭제인력 시간당 인건비 ×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

- ▶ 삭제지원인력(8인)의 시간당 인건비는 주 5일(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계산(한 달에 약 22일 근무)하였고,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은 피해자 1인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입했다는 삭제지원인력의 판단에 기반함. 이 때 삭제지원인력의 시간당 인건비는 해당 인력이 하는 모든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 즉, 삭제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 자료 작성, 간접비용인 상담 비용, 법률 및 의료비지원 연계비용 등도 반영된 비용임.



- ▶ 삭제지원인력의 월급명세서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건비 자료(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8)를 사용하였고, 1인당 연간 34,000,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음. 이를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한 달에 약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간당 인건비는  $((34,000,000\text{원}/12\text{개월})/22\text{일})/8$  시간인 16,099원으로 산정할 수 있음.
- ▶ 삭제지원인력의 근무일지 등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원자료는 입수하지 못함.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은 원자료가 없으면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대체 방안으로 피해자 1인당 최소 소요시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3\text{개월} \times (22\text{일}) \times 8\text{시간})$ 으로 528시간으로 계산함. 이에 의하면 구상권 행사의 기본금액이  $16,099\text{원} \times 528\text{시간} = 8,500,272\text{원}$ 이 됨. 보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원자료 구축이 필요함.

## [2안]

- ▶ [2안]은 [1안]에서처럼 사업인건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매해 확보 예산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1안]과 동일한 계산 방식을 사용하면서도 삭제지원인력 1인당 시간당 평균 인건비 기준을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매해 공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임금으로 대체하여 적용한 것임.
- ▶ 「2017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자료입력원은 14,245원, 초급기능사는 14,364원, 중급기능사는 19,811원임. 삭제 지원 인력은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므로 초급기능사 정도의 임금 14,364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에 따르면 구상권 행사의 기본금액이  $14,364\text{원} \times 528\text{시간} = 7,584,192\text{원}$ 이 됨.

## [3안]

- ▶ 삭제 인력의 인건비를 삭제지원인력의 인건비 증명자료로 계상하는 방식은 그 인건비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부터 논란이 될 수 있으며, 복잡해 질 수 있음.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는 그 특성으로 인해 재유포 가능성이 존재하여 한 번의 인건비 계상으로 피해회복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한번 삭제한다고 하여 모두 찾아서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집중삭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피해자 1인당 소요시간의 산정이 어려움. 소요되는 시간도 불법촬영물 유포 플랫폼(웹하드, SNS, 포르노 사이트 등)에 따라 한 건의 삭제요청 처리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소요시간 산정의 어려움이 있음.



- ▶ 그러므로 3안은 플랫폼에 따라 디지털 영상물의 유포에 대처하는 시간과 인력의 배분과 시간이 차이가 나며,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가 직면하는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청구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실제로 디지털장외사 업체도 한 달에 200만 원 혹은 사건에 따라 업체가 선정하는 방식 등 정액제로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고 있으며, 각 사건의 피해규모에 따른 인건비를 직접 계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불법촬영물 구상권 행사시 비용 산정은 건당 표준액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방법을 취한다고 할 때 가장 복잡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식2

①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요청 건수 x ②삭제지원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 x ③피해자 1인당 삭제 소요개월 수

- ▶ 먼저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요청 건수는 플랫폼별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임. 구체적으로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 표2 >와 같음.

< 표2 > 플랫폼 별 삭제 지원 현황

(기간: 18. 4.30. ~ 7.31.)

구분	소계	성인 사이트	P2P	SNS	웹하드	검색 결과 삭제*	기타 (커뮤니티 등)
삭제요청 (%)	5,287건 (100%)	2,597건 (49.1%)	602건 (11.4%)	899건 (17%)	290건 (5.5%)	573건 (10.8%)	326건 (6.2%)

\* 검색결과삭제 : 포털사이트(구글, 네이버 등)에 'OO녀' 등 검색결과 삭제 요청

자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부자료, 2018.8.

- ▶ 피해자 88명에 대한 성인사이트 3개월 누적 삭제지원건수는 2,597건,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가 29.5건이므로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지원 건수는 9.8건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개인 간 파일공유(P2P)는 2.3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3.4건, 웹하드는 1.1건, 검색결과 삭제는 2.2건, 기타는 1.2건으로 총합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건수는 약 20.0건으로 볼 수 있음.
- ▶ 삭제지원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는 3,400만원<sup>18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지원 사업 예산의 1인당 인건비이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내부자료(사업설명자료), 2018)</sup>÷12월=283만원으로 산출할 수 있음([3-1안]). 이 때 월평균 인건비 283만원은 삭제지원인력 1인이 피해자 1인의 업무에 100% 투입되는 경우임. 실제로 삭제지원인력 8명이 모두 삭제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283만원÷8=35만원을 적용할 수도 있음([3-2안]).



- ▶ 피해자 1인당 삭제 지원 소요 개월 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어 집중 삭제하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최소 기간을 3개월로 설정함. 실제로 센터에서 기간이 지나야 알 수 있지만, 디지털 장의사가 평균 3-6개월을 소요하므로 최소 3개월을 하는 방안, 평균값 하는 방안, 6개월을 최대치로 하는 방안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인사이트/개인 간 파일공유(P2P)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의 경우,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승인 비율 약 50%), 유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중 삭제 지원 기간(6개월)이 필요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6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SNS는 삭제 소요 기간이 평균 10일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므로 최소 삭제 집중 기간인 3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웹하드/커뮤니티는 국내 사업장이기 때문에 평균 2-3일 내에 삭제 가능하나, 최소 개월인 3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검색 결과 삭제의 경우, 원 게시글이 남아있지 않으면 평균 2-3일 내에 삭제 가능하지만 마찬가지로 집중 삭제 기간인 3개월을 청구기간으로 함.
- ▶ 식2에 따른 표준비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표3 > [3안]에 따른 플랫폼별 삭제지원 표준 비용(안)

구분	①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 (건)	②삭제지원 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만원)		③피해자 1인당 삭제 소요개월 수(개월)	월 표준비용 (안) (만원)	
		3-1안	3-2안		3-1안	3-2안
성인사이트	9.8	283	35	6	16,640	2,058
P2P	2.3	283	35	6	3,905	483
SNS	3.4	283	35	3	2,887	357
웹하드	1.1	283	35	3	934	116
검색결과 삭제	2.2	283	35	3	1,868	231
커뮤니티	1.2	283	35	3	1,019	126



#### [4안]

- ▶ [4안]은 월 표준비용 산출식은 [식2]를 사용하고, [3안]에서 삭제지원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만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가이드」를 따른 것임. 「통계법」 제27조(통계의 공표)에 따라 「2017년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통계승인 제37501호)」의 SW기술자 평균임금은 자료입력원은 2,370,347원, 초급기능사는 2,390,211원, 중급기능사는 3,296,592원임. 삭제 지원 인력은 해당 분야에서 교육을 받아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이므로 초급기능사 정도의 임금 2,390,211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4-1안]). 이 때 월평균인건비는 삭제지원 인력 1인이 피해자 1인의 업무에 100% 투입되는 경우임. 실제로 삭제 인력 8명이 모두 삭제지원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239만원 \div 8 = 29.8만원$ 을 적용할 수도 있음([4-2안]). 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 피해자 1인당 삭제 소요개월 수는 [3안]과 동일함. [4안]에 따른 표준비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표4 > [4안]에 따른 플랫폼별 삭제지원 표준 비용(안)

구분	①피해자 1인당 월평균 삭제 요청 건수 (건)	②삭제지원 인력 1인당 월평균 인건비 (만원)		③피해자 1인당 삭제 소요개월 수(개월)	월 표준비용 (안) (만원)	
		4-1안	4-2안		4-1안	4-2안
성인사이트	9.8	239	29.8	6	14,053	1,752
P2P	2.3	239	29.8	6	3,298	411
SNS	3.4	239	29.8	3	2,438	304
웹하드	1.1	239	29.8	3	789	98
검색결과 삭제	2.2	239	29.8	3	1,577	197
커뮤니티	1.2	239	29.8	3	860	107

## 소결

불법촬영물의 삭제지원으로 인한 구상권은 범죄피해자구조금에 대한 구상 등 다른 구상권과 달리 비용 지급이라는 출재 방식이 아닌 인력을 통한 삭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임.

그런데 불법게시물이 삭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하지 않는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구상하는 것은 구상권의 본질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가 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기관에서 처리하는 피해건수가 많아질수록 피해 건당 처리비용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임.



그러므로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한 사건 하나당 처리시간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그러나 사건을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기간을 어디까지 포괄할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나누어 시간을 계산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름. 즉, 이를 위하여 접수를 받아 피해자와 상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삭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후 삭제할 촬영물을 검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검색한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검색한 촬영물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 삭제가 진행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시간과 차후에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시간 등이 정확히 산출되어야 함. 아울러 피하자 1명에 대해 산출한다고 할지라도 플랫폼 별로 처리 시간이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업무의 목적과 종류를 일원화하여 정리하기 어렵고, 아직 삭제지원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기반 구축이 미비한 실정으로 해당 자료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은 정책담당자가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피해자를 기준으로 비용 산정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한 명일 때보다 가해자가 다수 존재할 경우 각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불합리함이 있음. 따라서 차후 국가의 삭제지원 서비스에 대한 삭제이력관리시스템 등을 개발할 때 삭제지원 건 당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유포된 영상물과 유포 행위자가 매칭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자료로 삭제지원 비용 표준(안)을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5

## 종합 논의

### 피해자 지원 방법 및 내용 관련 시행규칙 구체화

- ▶ 법률상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수행 방식을 통해서는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며,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현재의 사업운영 방식을 기관설치 운영 방식이나 지정위탁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삭제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취할 경우 법 또는 시행령 상에 삭제지원을 위한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
- ▶ 그 밖에 원활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상권 행사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 근거 조문 신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근거 조항 개정, 형사정보 관련 정보조회를 위한 규정 도입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삭제비용 산출 근거의 한계와 개선방안

-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은 현 시점에서의 가용 자료로 산출한 안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누적 자료, 적정 인력 활용 등 센터 업무가 효율적으로 정착된다면 보다 정교한 모형 및 자료로 삭제지원 비용표준(안)을 산출 가능할 수 있을 것임.

## 현행법상 삭제 지원 대상의 한계

- ▶ 현행법의 한계 내에서는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도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의 불법촬영물에 포섭되지 않고, 따라서 국가가 이들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할 수 없으며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만큼,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 국제공조의 강화

- ▶ 디지털 성범죄는 장소적 한계가 없이 누구든지 세계 어디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수사공조를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포된 해외 사이트 폐쇄 및 유포자 처벌 및 불법촬영물 확산 차단 필요

##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 ▶ 불법촬영물의 유포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촬영물 및 음란물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